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	
		배포일시	2020. 6. 29.(화) 총 4매(본문3)		
담당 부서	공공주택 총괄과	담당자	• 과장 강태석, 사무관 김병채·신동하, 주무관 민현식·박중길 • ☎ (044) 201-4539, 4514, 4519, 4578, 3362		
보도일시		2020년 6월 3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9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국토부, “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최선”

- 공공주택 협의체 발족, 26일 첫 회의서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방안 논의
- “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”,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도에서 지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,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“공공주택 협의체”를 발족하고, 17개 시·도와 6월 26일 첫 회의*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일시: '20. 6. 26. 14:00 ~ 16:00 / 장소 : 정부세종청사 /
참석: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, 시·도별 공공주택 담당 과장

-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'20년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, “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”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.
- “공공주택 협의체”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,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.

【 '20년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 】

-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'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.1만호로, 공급실적 점검결과 올해 6월까지 5.6만호를 공급하였다. 이는 작년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.
-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
- 아울러, 지역별 주택보급률, 공공임대 재고율·공가율, 무주택 가구 비율,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 및 공급여건을 파악하여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.
- 해당 시·도 평균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, 무주택 비율 및 민간 월세는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·군·구를 선별하여 공급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.

【 주요 지자체별 우수사례 】

-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. 우수사례는 주로 정부지원 기준평형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, 임대보증금·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는데, 1자녀 출산 시 50%,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한다.
 - 충청남도는 이러한 “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”을 ‘22년까지 1천호를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-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㎡에서 44㎡로 확대하여 공급하는 “경기도형 행복주택”을 ‘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.



- 광주시는 연접한 영구임대 공가 전용면적 26㎡ 2세대의 세대벽(비내력)을 철거하여 전용 52㎡ 1세대로 통합한 후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.
-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기존 생활권 재정착을 위해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소규모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, 입주자의 자립·육아·일자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연계하는 “우리집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- 이 밖에도 경기도와 같이 기존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는 대전시 “대전 드림타운”, 다자녀가구에게 매입임대의 임대보증금·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수원시 “다자녀 수원휴먼주택”,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서울시 “지원주택” 등이 있다.
- 지자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 상향 등을 주로 건의하였으며, 국토부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지자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.

【 기타사항 】

- 또한,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.
 -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,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,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다.
- 아울러,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.
 -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,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, 올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되었으며, '21년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“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,
 -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,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주택총괄과 김병채 사무관, 신동하 사무관(☎044-201-4514, 45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지자체	사업명칭	주요내용	공급계획
충청남도	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	○ 자녀 출산시 월임대료 지원 (1자녀 출산시 50%, 2자녀 출산시 무료) ◦ 최대가능면적 전용 59㎡ 평형을 70%까지 공급	충남개발공사 1천호 (~'22년)
경기도	경기도형 행복주택	○ 국비지원기준 면적보다 더 넓게 공급하고, 면적 초과분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를 도비로 지원 ◦ 출산시 면적초과분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(1자녀 출산시 60%, 2자녀 출산시 100%) ◦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(2룸 면적 확대 36㎡→44㎡, 공급비율 확대) ◦ 공동체 활성화 (주민커뮤니티시설 제공)	경기도시공사 1만호 LH공사 5만호 (~'22년)
	매입임대	○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50% 융자 지원(호당 250만원, 최대 20년)	1,050호 ('20년)
수원시	다자녀 수원휴먼주택	○ 다세대주택 매입후 보증금·임대료 전액 지원 ◦ 수원시 2년 거주, 4자녀 이상,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무주택 가구(최대 20년)	17호 (~'20)
인천광역시	우리집	○ 기존 생활권 내 재정착 위해 자립·육아·복지·문화 등 수요자 맞춤형 시설 연계한 영구임대 ◦ 우리집 플래너 통해 임대주택 수준향상	인천도시공사 510호 ('20년)
서울특별시	지원주택	○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◦ 장애인, 정신질환자, 노숙인, 요양보호대상 등	SH공사 866호 (~'22)
대전광역시	대전 드림타운	○ 국비지원기준 면적보다 더 넓게 공급하고, 면적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 지원 ◦ 신혼부부 전용 44㎡, 54㎡ 평형 반영	대전도시공사 1,850호 (~'25년)
광주광역시	영구임대 세대통합	○ 소형 장기 공가세대에 대하여 비내력벽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후 다자녀 가구에 공급 ◦ 전용26㎡(2세대) → 전용 52㎡(1세대)	광주도시공사 14호 ('20년)
	청년 주거사업	○ 영구임대 공가세대에 청년활동가 입주 후 재능 기부 통해 입주민들 간의 소통과 사회통합 유도	70호 (~'20년)
전라북도	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	○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 (영구임대, 50년임대, 국민임대, 매입임대) ◦ 호당 2천만원 이내, 최대 6년간 무이자 융자	전북개발공사 LH공사 (250호/1년)